「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2호(2016 여름): 273-298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0 No.2 (2016 Summer)
http://dx.doi.org/10.20484/klog.20.2.12

대구와 광주의 정치정향, 그리고 정치정향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비교연구*

류 태 건

국문요약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2016년 4월 시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두 지역의 정치정향들의 차이, 그리고 그러한 정치정향들이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한다. 분석대상인 정치정향은 국가에 대한 정향으로서 애국심과 국민자긍심, 정치체제에 대한 정향으로서 민주주의체제의 선호도 및 중요성 평가, 정부에 대한 정향으로서 4개 정부기관 즉 청와대·중앙행정부처·국회·법원에 대한 신뢰, 정당에 대한 정향은 정당선호, 그리고 정치적 자아에 대한 정향은 이념성향과 정치참여성향 등 11가지를 선정했다. 분석결과, 두 지역 사이에 정부와 정당에 대한 정향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나 정치체제 및 정치적 자아에 대한 정향은 별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정치정향들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두 지역에서 공히 국가에 대한 정향인 국민자긍심과 애국심은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여당선호는 긍정적 영향을 그리고 야당선호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여타 정치정향들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즉, 정부신뢰에 대해 두 지역 사이에서 정당선호정향 이외의 여타 정향들의 영향력은 별 차이가 없다. 결국, 정당선호의 차이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는 정부신뢰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두 지역의 여타 정치정향들의 특성이나 이들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은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두 지역 사이의 정치적 '균열'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정치정향, 정부신뢰, 대구, 광주, 지역주의

Ⅰ. 서론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2016년 4월 시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두 지역의 정치정향들의 차이, 그리고 그러한 정치정향들이 중앙정부[1)]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들 두 지역을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한 일차적인 이유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3A2047036).

1) '정부'라는 용어는 광의로는 국가의 통치기구 전체, 협의로는 행정부를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광의로 사용하고 있다.

정치에서 두 지역이 서로 상반되는 정당선호정향을 근거로 한 소위 지역주의를 대표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제는 지역주의가 아니다. 궁극적인 연구관심은 정당선호정향이나 투표성향을 넘어 여타 정치정향들은 두 지역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포괄적·체계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정향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이유는 한편 선거정치적 정향이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정부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향을 미쳐왔기에 여타 정치정향들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고, 다른 한편 정치과정에서 차지하는 정부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부는 국민을 대신해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며 그 이행여부를 판정하는 기구로서 대의정치과정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정부신뢰는 이러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국가구성원들이 자신의 다양한 정치적 정향(정치적 인식과 감정)을 바탕으로 판단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정치정향들의 종합이다. 정치정향으로서의 정부신뢰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신뢰가 지역의 독특한 정치정향들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정부신뢰의 형성요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것이다.

대구(내지 영남)와 광주(내지 호남)의 정치정향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민주화 이후 두 지역의 서로 상반되는 정당이나 정당지도자에 대한 선호정향과 이에 따른 투표행태 그리고 이로부터 형성된 지역주의의 문제에 치중되었으며, 아울러 이러한 지역주의를 두 지역의 균열구조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정치적 정향 혹은 태도는 정당이나 선거뿐만 아니라 국가나 체제 등 다양한 정치적 대상들에 대해서도 형성된다. 즉, 한 국가나 지역의 정치정향체계 혹은 정치문화는 다양한 정치정향들의 집합체이다. 선거정치적 지역주의는 정치정향의 일부에 불과하며, 따라서 지역 간의 정치적 균열을 해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선거정치적 지역주의를 대표하는 두 지역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본 연구는, 정치정향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오히려 그러한 지역주의의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어쨌든, 국가나 지역의 포괄적인 정치정향체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분석틀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 아래 제II장에서는 정치정향에 대한 분석틀을 모색하는 한편 두 지역의 정치정향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검토해보고, 제III장에서는 실증연구의 방법, 그리고 제IV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그 의미를 해석해본다.

Ⅱ. 이론적 검토

1. 정치(적)정향

지역의 정치정향들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정치정향들의 종합적인 분석틀을 정립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1965)의 정치문화 분석틀을 참고한다. 알몬드와 버바의 연구에서 한 국가나 집단의 정치문화란 그 구성원의 정치정향들의 독특한 분포를 뜻하고, 정치정향(political orientation)이란 정치적 대상들에 대한 행위자들(개인 혹은 집단)의

정향 혹은 태도를 뜻한다. 그리고 정향이란 파슨즈 등(Parsons and Shils 1967; Parsons 1951)이 정립한 행위이론에서의 행위정향을 말한다(Almond & Verba 1965, 14). 행위정향(orientations of action)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익히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지만, 본 연구를 위해 다시금 정리해본다.

파슨즈(Parsons 1951, 4)에 따르면, "행위란 행위자와 상황으로 구성된 체계(actor-situation system) 내의 한 과정이다. 이 과정은 개별 행위자 혹은, 집단의 경우에는, 집단 구성원들의 동기와 관련된 의미를 지닌다." 설명하자면, 개인 혹은 집단의 행위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상황은 대별하여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대상들로 구성된다. 행위는 상황 속에 주어진 이러한 대상들과 관련하여 일어난다. 행위이론의 용어에서 행위는 행동과 다르다. 행동이란 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응을 말한다. 그러나 행위는, 다른 동물의 생물학적 행동과는 달리, 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는 행위자의 동기(motivation)를 매개로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행위란 동기가 부여된 행동이다.[2] "동기란 다소간 본능적인 정향체계들(systems of orientations)로서, 이들은 어떤 행위의 수단이나 목표가 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한 인식(cognition)과 감정적 애착(cathectic attachment) 그리고 그 대상들에 대해 감정적인 관계들을 획득하고자 하는 다소간 무의식적이고 암묵적인 어떤 행위 계획들(plans of action)을 포함하고 있다(Parsons and Shils 1967, 111)."[3] 즉, 동기란 행위의 정향들을 말하며 이들 정향들은 기본적으로 3가지 종류로 대별된다. 하나는 인식(cognition) 혹은 인지적 정향(cognitive orientation)으로서, 이는 행위자의 관심에 따라 상황 속의 어떤 대상들의 양상이나 의미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감정(cathexis)[4] 혹은 감정적 정향(cathectic orientation)으로서, 이는 그 대상들에 대해 행위자가 욕구적인 만족과 불만, 호·불호의 감정을 갖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는 평가(evaluation) 혹은 평가적 정향(evaluative orientation)으로서, 이는 그 대상들에 대한 인식과 감정을 바탕으로 대상들에 대한 선택적·차별적인 평가를 내리고 어떤 행위를 준비하는 것("plans of action")을 말한다. 태도(attitude)의 개념을 "행위자의 인식과 감정, 그리고 평가와 이에 따른 행동경향성이 조합된 것(Henry Gleitman et al. 장현갑 외 역 1999, 571)"으로 규정한다면, 행위정향과 태도는 동의어이다.

정치정향이란 정치적 대상들에 대한 이러한 행위정향을 말한다. 그렇다면 정치적 대상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1965, 14-16)는 정치적 대상을 일단 전체 정치체계(political system as a whole)와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자아(self)로 대별한다. 그리고 전체 정

2) 파슨즈 등의 행위이론에 영향을 주고 있는 M. 베버의 표현에 따르면, "행위라 함은 어떤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에 주관적 의미를 결부시키거나 또는 결부시키는 한에 있어서의 인간의 행동-그것이 외면적이거나 내면적이거나, 또는 중단적이거나 지속적이거나 간에-을 일컫는 것이다(Max Weber, 양회수 옮김, 1998, 83)."

3) 정향에 관해 파슨즈와 실즈(Parsons and Shils 1967, 54)는 또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행위자의 정향체계는 수많은 구체적인 정향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행위정향은 행위자가 상황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명시적 혹은 묵시적,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서, 이는 행위자가 원하는 것(그의 목표), 보는 것(그에게 비춰진 상황), 그리고 보는 대상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방법(규범적으로 조정된 그의 명시적·묵시적 행위 '계획')에 대한 것이다."(( )는 파슨즈와 실즈의 것임)

4) "Cathexis는 어떤 대상과 관련된 유기체의 상태-행복감 혹은 불행감의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cathexis라는 용어는 affect라는 용어 보다 그 관련범위가 넓다. 그것은 affect에 대상을 더한 것이다. 그것은 대상지향적인 affect이다(Parsons and Shils, 1967, 10, 각주)."

치체계 차원의 정치적 대상을 국가(nation)와 정체(polity)로 구분한다. 또한 이러한 정치체계의 구성요소가 되는 정치적 대상들을 크게 3가지 종류로 대별하는 바, 즉 입법기관이나 집행기관 내지 정당이나 압력단체와 같은 구체적 역할 기구, 이러한 기구들의 역할 담당자, 그리고 특정한 공공정책의 결정이나 집행 등이다. 정치체계의 구성요소가 되는 이들 정치적 대상들은 다시금 정치체계의 투입 측면과 산출 측면의 대상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리하여 궁극적으로 알몬드와 버바의 분석틀에서 정치정향의 대상들은 전체 정치체계(국가와 정체), 투입 측면의 대상(입법부, 정당, 이익집단 등), 산출 측면의 대상(행정부와 법원) 및 자아의 4가지 차원으로 분류된다.

이상과 같은 알몬드와 버바의 정치문화 분석틀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인 정치적 대상으로서 전체 정치체계 차원의 국가와 정체, 투입 측면의 입법부와 정당, 산출 측면의 행정부와 법원, 그리고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자아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정향은 인지적 정향은 제외하고 주로 감정적, 평가적 범주의 정향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리하여 분석대상인 정치정향은, 아래 제III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국가에 대한 정향으로서 애국심과 국민자긍심, 정치체제에 대한 정향으로서 민주주의체제의 선호도 및 중요성 평가, 정부에 대한 정향으로서 4개 정부기관 즉 청와대·중앙행정부처·국회·법원에 대한 신뢰, 정당에 대한 정향은 정당선호, 그리고 정치적 자아에 대한 정향은 이념성향과 정치참여성향 등 11가지를 선정한다.

이러한 정치정향들의 정치체계 내에서의 의의를 이해하는 데에 이스튼의 정치적 지지 개념이 도움이 된다. 이스튼(Easton 1975; 류태건 2016, 7-9 참조)은 정치적 지지(political support)를 '한 개인이 그의 태도나 행동을 통해 어떤 정치적 대상에게 자기 자신을 평가적으로 지향하는 방식'이라고 규정한다. 즉 정치적 지지는 평가적 정향의 일종이다. 이스튼은 정치적 지지를 구체적 지지(specific support)와 포괄적 지지(혹은 확산적 지지. diffuse support)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한다. 우선, 구체적 지지는 대상의 차원에서 구체적이다. 그것은 (정부제도가 아니라) 정부당국에 대한 반응이다. 즉, 구성원들에게 경험적으로 인지된 정부의 산출물이나 성과 즉 정부의 결정, 정책, 성과, 행위, 발언 혹은 전반적인 행태에 대한 반응이다. 구체적 지지의 수준은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 체계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있다. 즉 인지된 정부당국의 산출물이나 성과에 대해 구성원들이 느끼는 만족감에 따라 구체적 지지의 수준은 등락한다. 포괄적 지지는 구체적 지지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포괄적 지지의 근본적인 의미를 아주 단순하게 서술하자면, 그것은 어떤 대상이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그 대상이 무엇인지 혹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그 대상이 가지는 포괄적인 의의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정부의 산출물이나 성과에 대한 구체적 지지는 등락을 거듭하더라도, 포괄적 지지는 정치적 대상에 대한 일반화된 애착의 형태로 지속될 수 있다. 말하자면 포괄적 지지는 구성원들이 그들의 욕구나 요구에 반하는 정부의 산출물이나 성과를 수용하거나 관용하도록 하는 호의적 태도나 선의지의 저장소이다. 포괄적 지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진다. 첫째로, 그것은 구체적 지지 보다 더욱 지속적인 경향이 있다. 정치적 대상 자체에 대한 애착을 의미하는 이러한 지지는 정부당국이 하는 일에 대한 당장의 불만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구성원들은 의회의 성과를 매우 낮게 평가하면서도 의회제도나 헌법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는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포괄적 지지는 어떤 의미에서

구체적 지지 보다 더욱 '근본적(basic)'이다. 구체적 지지는 오직 현재의 정부당국을 지향하는 반면, 포괄적 지지는 그들의 직책 자체, 그리고 통치체제와 국가(정치공동체)를 뒷받침하는 지지이다. 셋째로, 포괄적 지지는 통상 두 가지의 근원 즉 사회화 및 직접 경험으로부터 생겨난다. 끝으로, 포괄적 지지는 그 대상에 따라 다른 형태로 표명된다. 예를 들어, 정부나 통치체제에 대한 포괄적 지지는 통상 그 제도에 대한 신뢰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포괄적 지지는 '우리' 감정, 공통의식 혹은 집단정체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스튼의 정치적 지지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정치정향들 중 국가에 대한 정향인 애국심과 국민자긍심, 그리고 정치체제에 대한 정향인 민주주의체제의 선호도 및 중요성 평가는 포괄적 지지의 범주에 속하는 정향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기관들에 대한 신뢰는, 정부제도 가 아니라 정부당국에 대한 평가일 때에는 구체적 지지의 범주에 속한다. 다만 이스튼(Easton 1965; 1975)은 정치적 지지와 관련해서 정당과 정치적 자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자의 판단에는 정당에 대한 정향 역시, 정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당제도 자체가 아니라 특정 정당과 정당지도자에 대한 선호나 평가는 구체적 지지의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정치적 자아에 대한 정향으로서 이념성향이나 정치참여성향(말하자면, 참여형, 신민형, 지방형)은 개인의 구체적인 정치적 경험과 정치사회화의 내용들이 종합되어 형성되고, 수시로 바뀌기 보다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개인의 정치적 정체성의 일부를 형성하는 까닭에 정치적 지지("어떤 정치적 대상에게 자기 자신을 평가적으로 지향하는 방식") 중 포괄적 지지의 범주에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존연구 검토

본 연구는 지역주의를 주제로 하지 않는다. 다만, 두 지역의 정치정향들을 더욱 포괄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하며 따라서 아래에서는 주로 이러한 성격의 문헌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각 문헌의 내용 중 선거정치와 관련된 정치정향의 해석에 도움이 되도록 6공화국 역대 정부의 집권기간을 각주[5]에 소개해둔다.

이갑윤(2002)의 연구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 좀 길게 소개한다. 그는 전국을 서울·경기, 충청, 호남 및 영남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여러 가지 정치적 정향의 차이가 지지정당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무엇보다도, 그의 분석에 의하면 정치정향의 지역별 차이에는 두 가지 일반적인 경향이 나타난다. 첫째, 정치정향의 '추상성'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이가 다르다는 점이다. 즉, 이갑윤이 더욱 추상적 변수들이라고 분류하는 정치관심이나 정치참여 혹은 이념이나 가치관과 같은 변수들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거나 적게 나타나는 반면, 이슈나 정책 혹은 정치인의 선호와 평가와 같은 구체적인 변수들에서는 그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둘째, 지역별로 볼 때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지역은 호남과 영남 지역이라는 점

5) 노태우정부(1988-1993), 김영삼정부(1993-1998), 김대중정부(1998-2003), 노무현정부(2003-2008), 이명박정부(2008-2013), 박근혜정부(2013-2018)

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정향의 지역평균의 차이는 호남과 영남의 차이가 제일 크고, 다음이 호남과 전국평균, 영남과 전국평균 순으로 나타나며, 충청과 경기 지역은 전국 평균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자는 우선 첫째의 경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갑윤은 정치정향의 추상성과 구체성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작거나 크게 나타난다고만 지적하고 그 이유는 해명하지 않고 있다. 정치정향의 추상성과 구체성의 구분은 위에서 소개한 이스튼의 포괄적 지지와 구체적 지지의 구분과 개념적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스튼의 관점에서 해명될 수가 있다. 말하자면, 구체적 정치정향 즉 구체적 지지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더라도, 추상적 정치정향 즉 포괄적 지지는 좀 더 보편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둘째의 경향 즉 4개 지역 사이에서 지역평균의 차이가 가장 큰 영호남의 정치정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갑윤의 한국선거연구회 2000년도 조사자료 분석에 의하면, 정치참여의식은 영남인이 기타 지역인에 비해 약간 더 높고, 진보·보수에 관한 주관적 이념성향은 전국평균에 비해 호남인이 더욱 진보적이고 영남인이 약간 더 보수적이다. 한편, 제도신뢰의 경우에는 호남인이 기타 지역인에 비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고, 의회나 법원 등 여타 제도에 대해서도 매우 적은 차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영남인은 대통령에 대한 약간 낮은 신뢰도를 제외하면 서울·경기나 충청 지역인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정치정향의 지역별 차이는 당파성과 연관이 있는 변수들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호남인은 정치체제의 민주성에 대해 더욱 만족하는 반면 영남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감을 보이고, 호남인은 여성향 그리고 영남인은 야성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갑윤은 2000년도의 이러한 정치정향들을 조사시기를 달리한 과거의 여론조사 결과들과 비교해본다. 1988년 13대 총선 이후에 실시된 한국정치학회의 여론조사자료의 분석에 의하면 1988년 한국인은 일반적(추상적) 정치정향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정책과 정부의 평가나 제도적 신뢰에는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특히 영호남을 비교해보면 정치참여는 두 지역이나 여타 지역 사이에서 차이가 없고, 다만 정치에 대한 신뢰나 대통령에 대한 만족도는 전국평균에 비해 영남이 약간 높고 호남이 매우 낮다. 한편, 한국선거연구회의 1992년 및 1996년 조사자료의 분석에 의하면 정부업적평가와 민주체제에 대해 호남인은 불만을 영남인은 만족을, 그리고 호남인은 야당성향을 영남인은 여당성향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바, 이러한 정치정향은 먼저 살펴본 2000년 조사결과와는 완전히 상반된다. 이는 곧 영호남의 여야성향이 지지정당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리하여 이갑윤은 이슈 및 정책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지지정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지지정당의 입장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지역별 정치정향의 차이는 지역의 정당지지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결론짓는다.

김진하(2006)는 2005년 11월 서강대 동아연구소와 Research & Research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서베이 자료를 바탕으로 정치적 관심도, 정치적 효능감, 민주주의 의식, 강력한 행정부나 정부 선호도, 이념성향 등의 정치의식이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민주주의 의식과 이념성향에 대한 영호남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일 좋은 정치체제가 어느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항에서, '민주주의', '독재정부' 및 '상관없다'의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민주주의를 택한 비율이 광주·전라가 63.1%이고 대구·경북은 49.2%로서 광주·전라 지역의 민주주의 선호도가 더욱 높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평가한 진보·보수의 이념성향은 0-10 범위의 11점 척도에서 광주·전라가 4.51, 대구·경북은 5.5로 광주·전라가 보다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주·김도경·서영조(2008)는 부산과 광주 지역 대학생들의 정치성향을 2007년 1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비교분석하고 있다. 조사대상 지역이 대구가 아니라 부산이지만 영남 지역인지라 이 연구결과도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변수들 중 본 연구와 관련 있는 것은 이념성향이다. 이념성향은 외교정책에 있어서 '한미동맹'과 '북한과의 관계', 경제정책에 있어서 '경제성장'과 '분배·복지' 중 어느 쪽에 상대적 중요성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을 통해 측정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의 이념성향의 분포는 중앙(즉 중도성향)에 밀집되어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의 대학생들이 두 항목 모두에서 부산의 대학생들 보다 다소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봉(2010)은 2010년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 대학생들의 가치관과 정치이념, 정치참여, 투표행태 등을 비교하여 지역주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이념성향에 있어서 대구지역 대학생들은 타지역 대학생들 보다 자유주의 성향이 높고 평등주의 성향은 낮은 반면, 광주지역 대학생들은 자유주의 성향이 낮고 평등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참여의 경우에는 정치집회 참여와 선거운동 참여에서는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합법적 데모참여는 5점 척도 상에서 광주가 평균 1.68 대구가 1.41이고 비합법적 데모참여는 광주가 평균 1.53 대구가 1.26으로 모두 광주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설문조사시기(2010년 10월) 직전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참여율은 대구가 광주 보다 월등이 높다. 끝으로, 정부신뢰의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5점 척도에서 대구가 평균 2.67 광주가 2.15,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대구가 2.88 광주가 2.34로서 두 기관 모두 대구의 신뢰도가 높은 가운데,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지역별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박희봉은 대학생들 사이에도 지역주의 경향이 나타난다고 결론짓는다.

종합해보면, 광주(내지 호남)와 대구(내지 영남) 사이에서 이념성향은 모든 조사에서 광주가 좀 더 진보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선호도나 만족도는 조사(시기)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정치참여정향 역시 조사(시기)에 따라 달리 나타나며, 정당선호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고, 정부신뢰는 선호정당의 여야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 다만 두 지역의 국가에 대한 정향을 다룬 연구는 없다.

Ⅲ. 실증연구방법

1. 정치정향의 측정변수, 측정문항 및 측정척도

정치정향의 측정변수, 측정문항 및 측정척도를 아래 〈표 1〉에 소개해두고, 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정치체계 차원에서 국가와 정치체제에 대한 정향을 조사한다.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1965, 14, 63-64)는 애국심과 국민자긍심을 국가에 대한 감정적 정향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이에 의거 본 연구에서도 국가에 대한 정향의 측정변수로서 국민자긍심과 애국심을 선정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측정은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설문서의 관련 측정문항과 척도를 사용한다. 한편, 정치체제에 대한 정향은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선호감정과 중요성 평가를 통해 측정한다. 이들 두 가지에 대한 측정 역시 세계가치조사 설문서의 관련 측정문항과 척도를 사용한다.[6]

둘째, 정치체계의 구성요소 차원에서는 정부와 정당에 대한 정향을 조사한다. 우선, 정부에 대한 정향은 정부에 대한 신뢰 즉 정부신뢰를 통해 측정한다. 신뢰는 신뢰대상에 대한 인식과 감정을 기반으로 한 긍정적 평가나 기대를 뜻하는바(김우택·김지희 2002, 34), 정부신뢰는 정부에 대한 이러한 평가적 정향이라 할 수 있다. 정부신뢰는 정부기관에 따라 그 신뢰의 정도나 근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부기관을 청와대, 중앙행정부처, 국회 및 법원의 4개 기관으로 분리하여 이들 기관에 대한 신뢰를 각각 측정한다. 이들에 대한 측정 역시 세계가치조사 설문서의 관련 문항과 척도를 사용하며[7] 다만 청와대는 본 연구자가 추가하였다. 한편 정당에 대한 정향은 정당에 대한 선호감정 즉 정당선호를 측정하며, 조사시기의 주요 정당들을 선택지로 제시한다.

셋째, 정치적 자아의 차원에서는 이념성향과 정치참여성향을 조사한다. 이들 두 변수는 정치학에서 전통적으로 주요한 정치적 태도 변수로 취급되어 왔다. 이념성향은 응답자의 주관적 진보-보수 성향을 10점 의미분화척도로 측정한다. 그리고 정치참여성향은 관습적(conventional), 비관습적(unconventional) 정치참여형태를 망라하여 가능한 모든 형태의 정치참여성향을 조사한다. 관습적 정치참여활동의 측정변수와 설문은 버바와 나이(Verba & Nie 1972: 56-73, Appendix B)를 참고했다. 다만 이들의 연구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정치참여 활동의 측정이 빠져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추가한다. 그리고 비관습적 정치참여 즉 항의활동의 측정변수는 반즈와 카아즈 외(Barnes, Kaase et al. 1979: 57-84)를 참고했는바, 항의활동은 대체로 그 참여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에서와 같이 실제적 참여(참여경험)와 함께 잠재적 참여(참여의향)를 측정한다. 참고로, 이들의 항의활동 측정문항들은 세계가치조사 설문서에서도 사용되고 있다.[8]

---

6)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6.jsp Wave 6(2010-2014), Questionnaire, V211, V66, V130, V140.

7)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6.jsp Wave 6(2010-2014), Questionnaire, V114, V115, V117.

끝으로, 아래 〈표 1〉에서 작은따옴표(‘ ’)로 표시한 용어는 앞으로의 분석에서 사용할 변수명임을 밝혀둔다.

〈표 1〉 정치정향대상, 측정변수, 관련 설문과 척도

정향대상	측정변수		설문 [‘변수명’]	척도
국가	‘국민 자긍심‘		귀하께서는 한국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1. 매우 자랑스럽다 2. 자랑스러운 편이다 3.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4.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애국심’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귀하께서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꺼이 싸우시겠습니까?	1. 예 2. 아니오
정체	‘민주체제 선호’		국가통치의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정치체제(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좋다 2. 약간 좋다 3. 약간 나쁘다 4. 매우 나쁘다
	‘민주통치 중요’		귀하께서는 민주적으로 통치되는 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점 의미분화 척도)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10.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정부	‘정부신뢰’		아래의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해당 응답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청와대[‘청와대신뢰’] (2) 중앙행정부처[‘중앙행정부처신뢰’] (3) 국회[‘국회신뢰’] (4) 법원[‘법원신뢰’]	1. 매우 신뢰한다 2. 신뢰하는 편이다 3.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정당	‘선호정당’		귀하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정당은 무엇입니까?	1. 새누리당 2. 더불어민주당 3. 국민의당 4. 정의당 5. 민중연합당 6. 기타 7. 없다
자아	‘이념성향’		가장 진보적인 사람을 1, 가장 보수적인 사람을 10 이라고 할 때, 귀하께서는 어디쯤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번호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0점 의미분화 척도) 1. 가장 진보 10. 가장 보수
	정치 참여	관습적 참여 활동	귀하께서는 지난 몇 해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 공직선거에서 타인에게 투표권유[‘투표권유’] (2) 공직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활동[‘선거도움’] (3) 공직선거와 관련된 집회나 단체 참여[‘선거집회참여] (4) 정치헌금 기부[‘정치헌금’] (5) 국가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활동[‘단체활동’] (6) 국가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자나 공공기관 접촉[‘공적접촉’] (7)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자나 공공기관 접촉[‘사적접촉’] (8)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정치참여나 선거운동[‘사이버정치활동’] (9) 정치나 시사 관련 토론회나 설명회 참석[‘토론회참여’] (10) 공공기관 주최의 공청회나 위원회 참석[‘공청회참여’]	1. 전혀 없다 2. 몇 번 있다 3. 많이 있다
		항의 활동	아래와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경험 혹은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1) 탄원이나 진정서 서명[‘진정서서명’] (2) 공과금 납부 거부[‘공과금거부’] (3) 불매운동[‘불매운동’] (4) 집회나 시위[‘집회시위’] (5) 파업이나 태업[‘파업태업’] (6) 교통방해[‘교통방해’] (7) 건물점거나 농성[‘점거농성’]	1. 참여한 경험이 있다 2. 참여할 의향이 있다 3. 참여할 의향이 없다
		투표 참여	귀하께서는 각종 공직선거에서 얼마나 자주 투표하십니까? (1) 대통령선거[‘대통령선거’] (2) 국회의원선거[‘국회의원선거’] (3) 지방선거(시장·구청장·시구의원)[‘지방선거’]	1. 매번 투표한다 2. 대부분 투표한다 3. 가끔 투표한다 4. 전혀 투표하지 않는다

8)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6.jsp Wave 6(2010-2014), Questionnaire, V85-V89.

2. 자료수집방법

설문조사의 방법은, 20세 이상 대구 및 광주 시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각 지역별로 표본수는 840명으로 정하고, 표본추출은 구(區)의 인구별·성별·연령별 비례층화표집법을, 자료수집은 설문지의 배포수거방법을 택했다. 조사기간은 광주가 2016년 4월 19일-4월 26일, 대구가 4월 22일-4월 29일이다. 이리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 답변이 부실한 것들을 제외하고 대구 832매와 광주 832매 등 총 1664매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확정했다.

표본의 인구학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 대구의 경우, 성별은 남자 49%, 여자 51%; 연령은 20대 17.2%, 30대 19.7%, 40대 19.8%, 50대 20.2%, 60대 이상 23.1%; 월평균 가구수입은 100만원 미만 11.1%, 100-199만원 18.1%, 200-299만원 31.0%, 300-499만원 28.7%, 500만원 이상 11.2%;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4.9%, 중학 중퇴 혹은 졸업 9.6%, 고교 중퇴 혹은 졸업 34.0%, 전문대 졸업 혹은 대학 중퇴 24.6%, 대졸 이상 26.9%이다. 광주의 경우, 성별은 남자 51%, 여자 49%; 연령은 20대 16.1%, 30대 20.4%, 40대 20.3%, 50대 20.1%, 60대 이상 23.1%: 월평균 가구수입은 100만원 미만 9.3%, 100-199만원 21.3%, 200-299만원 25.2%, 300-499만원 28.1%, 500만원 이상 16.1%;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5.5%, 중학 중퇴 혹은 졸업 9.6%, 고교 중퇴 혹은 졸업 27.3%, 전문대 졸업 혹은 대학 중퇴 22.2%, 대졸 이상 35.4%이다.

3. 분석방법

1) 정치정향 분석

정치정향의 현황에 대한 분석은 광주와 대구 두 지역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빈도분석이나 교차분석 혹은, 서술 상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별 평균분석을 활용한다. 그런데 특히 정치참여정향의 경우, 관습적 참여활동은 10개 변수, 항의활동(비관습적 참여활동)은 7개 변수, 그리고 투표참여는 3개 변수 등 모두 20개의 변수로 측정했는바, 이들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공통요인으로 묶어 유형변수(합성척도)를 구성해서 분석한다. 아래에서는 이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와 새로 구성된 유형변수를 소개한다.

정치참여 관련 전체 20개 측정변수를 투입하여 요인분석(주성분분석 및 베리맥스 회전)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2〉에서 보듯이 5개의 고유값 1.0 이상의 요인들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요인에 의해 설명된 총분산은 71.321%이다. KMO 값은 .863로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선정은 좋은 편이며, 요인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성형 검정치는 x^2=19337.082, 유의확률 p=.000로서 이 자료를 이용한 요인분석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측정변수 '정치헌금'은 요인적재값이 2개 요인(공공활동요인 .486, 선거활동요인 .475)에 큰 차이 없이 분산되어 적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관계가 애매한 '정치헌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19개 변수들을 요인분석결과에 의거 유형변수로 합성한다. 새로 합성된 유형변수와 그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활동'(공적 접촉+공청회참여+사적 접촉+토론회참여+단체활동+사이버정치활동)
2. '과격항의'(점거농성+교통방해+파업태업+집회시위+공과금거부)
3. '투표참여'(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대통령선거)
4. '선거활동'(선거도움+투표권유+선거집회참여)
5. '온건항의'(진정서서명+불매운동)

〈표 2〉 정치참여 측정변수 요인분석 결과

	1(공공활동)	2(과격항의)	3(투표참여)	4(선거활동)	5(온건항의)	신뢰계수 α
공적 접촉	.821	.070	.038	.143	.062	.875
공청회참석	.815	.032	.035	.102	.035	
사적 접촉	.784	.081	.004	.037	.099	
토론회참여	.757	.074	.003	.225	.025	
단체활동	.709	.050	.059	.316	.104	
사이버정치활동	.626	.129	-.062	.250	-.024	
정치헌금	.486	.096	.050	.475	.083	-
점거농성	.106	.915	-.047	.002	.026	.766
교통방해	.116	.914	-.060	.039	.014	
파업태업	.090	.826	-.011	.044	.260	
집회시위	.128	.640	.018	.119	.507	
공과금거부	.036	.619	-.101	.081	.437	
국회의원선거	.019	-.056	.968	.064	.034	.935
지방선거	.026	-.044	.938	.044	.029	
대통령선거	.017	-.044	.914	.059	.039	
선거도움	.373	.091	.028	.803	-.024	.766
투표권유	.171	-.040	.130	.742	.165	
선거집회참여	.511	.135	.000	.676	-.036	
진정서서명	.095	.147	.099	.068	.832	.661
불매운동	.075	.465	.020	.037	.708	
고유값	4.152	3.467	2.708	2.162	1.776	
설명된 분산(%)	20.758	17.334	13.540	10.808	8.881	
KMO=.863 x^2=19337.082 p=.000						

2) 정치정향의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분석

정치정향들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한다.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대구와 광주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두 지역을 분리하고 또한 종속변수인 정부신뢰 역시 정부기관들을 분리하여 청와대, 중앙행정부처, 국회 및 법원에 대한 신뢰를 따로 분석한다. 따라서 다중회귀모형은 모두 8개로 정립된다. 한편, 분석에 투입될 독립변수들은 정부신뢰를 제외한 모든 정치정향 변수들이며, 다만 정치참여 측정변수들은 요인분석을 통해 합성한 유형변수들

을 사용한다. 아울러,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가구수입의 4개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도입한다. 그리고 명목척도로 측정된 변수들은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분석에 투입하며, 이때 애국심은 '아니오'(싸우지 않는다), 성별은 '여자', 선호정당은 '없다'(선호정당 없다)를 '0'으로 코딩하여 기준범주로 삼는다. 끝으로, 사회과학에서는 리커트 형 척도와 같이 연속구간에 수량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변수이면 등간척도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김두섭·강남준 2008, 21), 회귀식의 추정방식은 최소제곱법(OLS)을 사용한다. 이리하여 8개 회귀모형은 공히 다음의 회귀식(절편, 회귀계수 생략)으로 나타낼 수 있다.

2개 지역 4개 정부기관신뢰=국민자긍심+애국심더미+민주체제선호+민주통치중요+이념성향+선거활동+공공활동+온건항의+과격항의+투표참여+새누리당더미+더민주당더미+국민의당더미+성별+연령+교육수준+가구수입+ε

Ⅳ. 분석결과

1. 대구와 광주의 정치정향

1) 국가에 대한 정향

국가에 대한 정향은 국민자긍심과 애국심을 통해 측정했다. 우선, 아래 〈표 3〉에 의거 국민자긍심의 대구와 광주 사이의 차이를 살펴본다. 교차분석 결과, 검정통계량은 x^2=3.488, 유의확률 p=.322로서 두 지역의 국민자긍심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매우 자랑+자랑스러운 편)는 사람이 대구가 78.9%, 광주가 75.9%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다. 따라서 두 지역의 국민자긍심의 수준은 유사하게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 국민자긍심 차이

단위: 명(%)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자랑스러운 편이다	매우 자랑스럽다	합계	x^2	p
대구	20(2.4)	155(18.7)	544(65.7)	109(13.2)	828(100)	3.488	.322
광주	18(2.2)	183(22.0)	514(61.9)	116(14.0)	831(100)		
합계	38(2.3)	338(20.4)	1058(63.8)	225(13.6)	1659(100)		

다음으로, 아래 〈표 4〉에 의거 애국심에 대한 두 지역 사이의 차이를 살펴본다. 교차분석 결과, 검정통계량은 x^2=.319, 유의확률 p=.572로서 애국심 역시 두 지역 간에 차이가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를 위해 기꺼이 싸우겠다'는 사람이 대구가 72.4%, 광주가 71.1%로서 거의 동일하다. 참고로, 동일 문항에 대해 20세 이상 한국인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한 세계가치조사 자료의 분석에서는 조사연도 2005년에 72%, 2010년도에 68%를 기록하고 있다(류태건 2016, 17).

결론적으로, 국민자긍심과 애국심을 통해 분석한 국가에 대한 정향은 두 지역 사이에 차이가 없이 유사하다.

〈표 4〉 애국심 차이

단위: 명(%)

	싸운다	안 싸운다	합계	x^2	p
대구	592(72.4)	226(27.6)	818(100)	.319	.572
광주	586(71.1)	238(28.9)	824(100)		
합계	1178(71.7)	464(28.3)	1642(100)		

2) 정치체제에 대한 정향

두 지역의 정치체제에 대한 정향을 분석한다. 정치체제에 대한 정향은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선호도 및 민주적 통치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측정했었다. 우선, 아래 〈표 5〉에 의거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본다. 교차분석 결과, 검정통계량은 x2=16.051, 유의확률 p=.001로서, 유의수준 p〈.01에서 두 지역 사이에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주의체제를 '좋다'(매우+약간 좋음)고 느끼는 사람이 대구가 85.4%, 광주가 90.7%로서,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선호도는 대구에 비해 광주가 5.3%p 높다. 앞서 검토한 이갑윤(2002)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체제에 대한 '만족도'는 선호정당의 집권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김진하(2006)나 본 연구에 따르면 민주체제에 대한 '선호도'는 선호정당의 집권여부에 상관없이 광주가 대구 보다 높다. 체제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도는 서로 좀 다를 수 있다. 만족도는 욕구나 기대의 충족의 문제이고 선호도는 좋고 싫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표 5〉 민주주의체제 선호도 차이

단위: 명(%)

	매우 나쁨	약간 나쁨	약간 좋음	매우 좋음	합계	x^2	p
대구	27(3.3)	93(11.3)	388(47.0)	317(38.4)	825(100)	16.051	.001
광주	10(1.2)	67(8.1)	445(53.6)	308(37.1)	830(100)		
합계	37(2.2)	160(9.7)	833(50.3)	625(37.8)	1655(100)		

다음으로, 아래 〈표 6〉에 의거 민주적 통치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다. 이 변수는 1-10점 범위의 의미분화척도로 측정했으나 구체적인 정보를 소개하기 위해 척도를 5개 범주로 나누어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교차분석 결과, 검정통계량은 x2=4.733, 유의확률 p=.316으로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민주적 통치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두 지역 사이에 차이가 없다. (애초의 10점 척도에서 평균값을 계산해보면 대구는 7.54점, 광주는 7.50점이다.)

결국, 정치체제에 대한 정향으로서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선호감정은 광주가 대구에 비해 약간 높으나, 민주적 통치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두 지역 간 차이가 없다.

〈표 6〉 민주적 통치 중요도 차이

단위: 명(%)

	1-2점	3-4점	5-6점	7-8점	9-10점	합계	x^2	p
대구	33(4.1)	54(6.6)	149(18.3)	238(29.2)	340(41.8)	814(100)	4.733	.316
광주	29(3.5)	67(8.1)	164(19.9)	208(25.2)	357(43.3)	825(100)		
합계	62(3.8)	121(7.4)	313(19.1)	446(27.2)	697(42.5)	1639(100)		

3) 정부에 대한 정향

정부에 대한 정향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통해 측정했다. 서술의 편의를 위해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다. 대구와 광주 사이의 정부신뢰의 차이를 아래 〈표 7〉의 t검증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와대신뢰의 경우, 대구와 광주 사이의 차이검증에서 t=10.844, p=.000으로서 두 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백분위 평균값을 통해 살펴보면, 대구는 49.0점, 광주는 35.7점으로서 대구가 광주에 비해 14.3점이나 높다. 중앙행정부처신뢰의 경우, 두 지역의 차이검증에서 t=6.441, p=.000으로 역시 유의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백분위 평균값을 통해 살펴보면, 대구는 44.7점, 광주는 37.3점으로서 대구가 광주에 비해 7.4점이 높다. 법원신뢰의 경우, 두 지역의 차이검증에서 t=2.020, p=.044로서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대구는 46.3점, 광주는 43.7점으로, 대구가 광주에 비해 2.6점이 높다. 다만, 국회신뢰의 경우에는 t=-.174, p=.862로서 두 지역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 즉 국회신뢰도는 대구가 33.0점, 광주가 33.3점으로서 조사대상 4개 정부기관 중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하는 가운데 두 지역의 신뢰수준은 거의 동일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지적할 점은, 두 지역 간에서 청와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큰 차이가 나고, 중앙행정부처에 대한 신뢰도의 차이가 그 뒤를 이으며, 법원에 대한 신뢰도 역시 미미한 차이가 나타나나,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청와대의 상징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정당을 기반으로 하며, 정당은 한국정치상황에서 지역성을 띠고 있다. 즉 정부기관 중 청와대가 정당이나 지역과의 관련성이 매우 강하다. 또한 중앙행정부처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부처장에 의해 통솔되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집행한다. 따라서 역시 응답자의 정당성향 내지 지역성향이 중앙행정부처신뢰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다만, 법원 자체는 원칙상 지역성향이나 정치성향이 없기는 하나 대구가 광주 보다 미미하게나마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전국 각 지역 출신 의원들의 혼합체이다. 따라서 전체로서의 국회는 특정한 지역성향이나 정당성향이 없다. 국회 전체의 혼합적 특성이 국회신뢰도의 지역 간 차이가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위에서 살펴본 4개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는 대구나 광주의 전체 응답자의 종합적인 정향이다. 그러나 뒤에서 소개할 영향요인분석에서 이러한 종합적인 정향을 응답자들의 정치정향별

로 구분해서 분석해보면, 법원이나 국회를 포함해서 모든 4개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는 두 지역에서 공히 응답자의 정당선호 정향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점을 먼저 언급해둔다.

〈표 7〉 정부신뢰의 차이

변수	집단	N	평균(백분위 평균)	표준편차	t	p
청와대신뢰	대구	827	1.47(49.0)	.759	10.844	.000
	광주	824	1.07(35.7)	.739		
중앙행정부처신뢰	대구	819	1.34(44.7)	.697	6.441	.000
	광주	823	1.12(37.3)	.689		
국회신뢰	대구	825	.99(33.0)	.703	-.174	.862
	광주	825	1.00(33.3)	.709		
법원신뢰	대구	822	1.39(46.3)	.707	2.020	.044
	광주	828	1.31(43.7)	.733		

4) 정당에 대한 정향

분석에 앞서, 정당에 대한 정향은 선거시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변수임을 지적해둔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6년 4.13 총선 직후 4월말에 시행되었던바, 이 분석결과는 그 총선 당시의 정당성향을 반영하고 있다.

정당에 대한 정향은 정당선호를 통해 측정했다. 아래 〈표 8〉의 빈도분석 결과를 통해 정당선호도를 살펴보면, 새누리당을 선호하는 비율은 대구와 광주가 각각 41.6%와 2.8%이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각각 12.1%와 25.4%,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각각 6.0%와 53.8%, 그리고 선호정당이 없다는 응답자가 각각 40.3%와 18.0%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구에서는 선호정당이 없다는 무당파층이 40.3%나 되는바, 4.13 총선 시기에 대구에서는 여야정당에 대한 일체감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2016년 4.13 총선의 비례대표선거에서 대구는 54.8%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유효투표수 중에서 정당별 득표율은 새누리당 53.06%, 더불어민주당 16.30%, 국민의당 17.42%, 기타 13.22%; 그리고 광주는 61.6%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유효투표수 중에서 정당별 득표율은 새누리당 2.86%, 더불어민주당 28.59%, 국민의당 53.34%, 기타 15.21%이었다.[9)]

〈표 8〉 선호정당

단위: 명(%)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선호정당 없음	합계
대구	323(41.6)	94(12.1)	47(6.0)	313(40.3)	777(100)
광주	21(2.8)	192(25.4)	406(53.8)	136(18.0)	755(100)

주: 여타 정당 제외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5) 정치적 자아에 대한 정향

정치적 자아에 대한 정향은 이념성향과 정치참여성향을 통해 측정했다. 우선, 이념성향에 대한 응답자 자신들의 주관적 평가를 살펴본다. 이 변수는 1-10점 범위의 의미분화척도로 측정했으나, 우선 구체적인 정보를 소개하기 위해 척도를 5개 범주로 나누어 교차분석을 실행하고, 다음으로 정보를 단순화하기 위해 애초의 10점 척도의 측정자료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행한다. 아래 〈표 9-1〉에 제시한 교차분석 결과, 검정통계량은 x2=18.797, 유의확률 p=.001로서, 유의수준 p〈.01에서 두 지역 사이에 이념성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진보성향(매우+약간) 사람들의 비율이 대구가 34.2%이고 광주가 38.9%로서 광주가 4.7%p 높은 반면, 보수성향(매우+약간) 사람들의 비율은 대구가 27.5%이고 광주가 20.7%로서 대구가 6.8%p 높다. 다만, 대구나 광주 공히 중도성향의 사람들이 1/3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중도성향의 사람들은 대구가 38.3% 그리고 광주가 40.5%로서 두 지역 사이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두 지역의 이러한 차이를 단순화시켜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행해보면, 아래 〈표 9-2〉에서 보듯이 t=3.006, p=.003으로서 유의수준 p〈.01에서 두 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백분위 평균값을 통해 살펴보면, 대구는 52.5점, 광주는 49.4점으로서 평균차는 3.1점이며 그만큼 광주가 대구 보다 진보성향이 강하다. 종합적으로 말해, 두 지역의 이념성향은 중도성향으로 수렴되는 가운데 다만 상대적으로 보아 광주가 대구 보다 다소 진보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검토한 모든 기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념성향의 차이가 두 지역의 선호정당의 차이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차이는 두 지역의 선호정당의 이념성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표 9-1〉 이념성향(교차분석)

	매우 진보 (1-2점)	약간 진보 (3-4점)	중도 (5-6점)	약간 보수 (7-8점)	매우 보수 (9-10점)	합계	x^2	p
대구	79(10.1)	189(24.1)	300(38.3)	154(19.7)	61(7.8)	783(100)	18.797	.001
광주	72(9.1)	236(29.8)	321(40.5)	135(17.0)	29(3.7)	793(100)		
합계	151(9.6)	425(27.0)	621(39.4)	289(18.3)	90(5.7)	1576(100)		

〈표 9-2〉 이념성향(독립표본 t검증)

변수	집단	N	평균(백분위 평균)	표준편차	t	p
이념성향	대구	783	5.25(52.5)	2.148	3.005	.003
	광주	793	4.94(49.4)	1.898		

다음으로, 정치참여정향을 살펴본다. 정치참여정향은 서술의 편의를 위해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다. 그리고 아래 〈표 10〉의 평균치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각주[10]에 그 값의 의미를 설명

10) 선거활동과 공공활동은 관련 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다=1', '몇 번 있다=2', '많이 있다=3'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온건항의와 과격항의는 관련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1', '참여할 의향이 있다=2', '참

해둔다. 대구와 광주 사이의 정치참여의 차이를 〈표 10〉의 t검증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정치참여정향은 투표참여를 제외하고는 두 지역이 전반적으로 참여정향이 낮은 가운데, 5가지의 정치참여 유형들 중에서 선거활동, 공공활동 및 과격항의는 두 지역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고, 다만 온건항의와 투표참여성향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후자에 대해서만 검토하기로 한다. 온건항의의 경우, t값은 -2.389, 유의확률 p값은 .017로 계산되어 p〈.05에서 대구와 광주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광주(1.74)가 대구(1.66)에 비해 그 참여정향이 조금 더 강하다. 한편, 투표참여성향은 '귀하께서는 각종 공직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자주 투표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조사했음을 환기시켜둔다. 즉, 특정 선거에서의 투표참여 여부가 아니라 일반적인 투표참여성향을 조사했다. 분석결과, t값은 -3.213, p값은 .001로서 p〈.01에서 대구와 광주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광주(3.54)가 대구(3.42)에 비해 투표참여성향이 다소 강하다. 종합적으로 말해, 온건항의와 투표참여의 성향이 광주가 대구 보다 조금 더 강하나, 여타 유형의 정치참여 성향은 두 지역 사이에 차이가 없다.

〈표 10〉 정치참여 차이

변수	집단	N	평균(척도범위)	표준편차	t	p
선거활동	대구	817	1.33(1-3)	.465	-.712	.476
	광주	825	1.35(1-3)	.456		
공공활동	대구	810	1.17(1-3)	.361	-.861	.389
	광주	819	1.19(1-3)	.340		
온건항의	대구	817	1.66(1-3)	.628	-2.389	.017
	광주	818	1.74(1-3)	.610		
과격항의	대구	818	1.30(1-3)	.476	.392	.695
	광주	816	1.29(1-3)	.421		
투표참여	대구	823	3.42(1-4)	.804	-3.213	.001
	광주	822	3.54(1-4)	.715		

2. 정치정향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서는 두 지역의 정치정향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앞의 '분석방법'에서 소개했듯이 종속변수인 정부신뢰는 청와대, 중앙행정부처, 국회 및 법원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고, 독립변수는 위에서 살펴본 여타 모든 정치정향변수들을 투입하며, 성별·

여한 경험이 있다=3'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고, 투표참여는 '전혀 투표하지 않는다=1', '가끔 투표한다=2', '대부분 투표한다=3', '매번 투표한다=4'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예를 들어, 선거활동의 대구 평균치 1.33은 '전혀 없다=1'과 '몇 번 있다=2' 사이에서 1(전혀 없다)에 더욱 가까운 수치이고, 온건항의의 대구 평균치 1.57은 '참여할 의향이 없다=1'과 '참여할 의향이 있다=2' 사이에서 2(참여할 의향이 있다)에 조금 더 가까운 수치이며, 투표참여의 대구 평균치 3.42는 '대부분 투표한다=3'과 '매번 투표한다=4' 사이에서 3(대부분 투표한다)에 조금 더 가까운 수치이다.

연령·교육수준·가구수입의 4개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도입한다. 덧붙여, 애국심은 '아니오'(싸우지 않는다), 성별은 '여자', 각 선호정당은 '없다'(선호정당 없다)를 '0'으로 코딩한 더미변수를 사용함을 환기해둔다. 아래 〈표 11〉에서 보듯이 8개의 다중회귀모형은 모두 유의수준 .01 이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며, 모형들의 설명력은 최소 10.1%에서 최대 27%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제 아래 〈표 11〉에 의거 각 회귀모형의 표준화계수 베타를 중심으로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검토한다.

〈표 11〉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분석

	표준화 계수 베타							
	청와대신뢰		행정부처신뢰		국회신뢰		법원신뢰	
	대구	광주	대구	광주	대구	광주	대구	광주
국민자긍심	.205***	.337***	.198***	.315***	.124**	.291***	.175***	.271***
애국심더미	.141***	.149***	.145***	.168***	.088*	.127**	.142***	.120**
민주체제선호	.048	.027	.097*	.013	-.010	.010	.134**	.016
민주통치중요	.027	-.044	.073	-.031	.082*	-.062	.060	.032
이념성향	.015	-.017	.059	-.010	.039	-.027	.030	-.055
선거활동	.061	.068	.010	.064	.066	.063	.005	.077
공공활동	-.007	-.089	.063	-.013	-.054	-.055	-.012	-.011
온건항의	-.095*	.009	-.141**	-.001	-.082	-.030	.025	-.015
과격항의	.046	-.060	.047	-.072	.070	-.023	-.012	-.077
투표참여	.001	-.065	.027	-.069	.033	-.106*	.035	-.066
새누리당선호	.272***	.141***	.208***	.118**	.144**	.100*	.073	.071
더민주당선호	-.080*	.078	-.048	.068	-.014	.110*	.003	.068
국민의당선호	.018	.023	.028	.028	-.026	.113*	-.076	.034
성별더미	-.041	.000	-.052	-.009	-.108**	-.067	-.070	-.001
연령	.090*	.025	.048	.016	-.105*	-.018	-.012	-.020
교육수준	.067	-.044	.072	.011	-.119*	.011	-.121**	.010
가구수입	-.092*	-.018	-.065	-.018	.001	-.087*	.057	.001
F	13.811***	10.122***	11.527***	8.603***	4.196***	7.900***	6.406***	5.617***
R^2	.270	.214	.236	.188	.101	.175	.147	.131

* p〈.05 ** p〈.01 *** p〈.001

1) 청와대 신뢰

청와대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정향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대구의 경우, 국민자긍심(.205), 애국심(.141) 및 새누리당선호(.272)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온건항의(-.095)와 더불어민주당선호(-.080)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광주의 경우, 국민자긍심(.337), 애국심(.149) 및 새누리당선호(.141)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구와 광주에서 공히, 국민자긍심, 애국심 및 새누리당선호는 청와대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고 그 영향력의 크기도 여타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즉, 대구나 광주 지역을 불문하고 국민자긍심, 애국심 및 새누리당선호의 정도가 클수록 청와대를 더욱 신뢰한다. 한편, 광주와는 달리 대구에서는 온건항의 참여정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청와대를 더욱 신뢰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중앙행정부처 역시 더욱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온건항의는 탄원이나 진정서서명 및 불매운동을 포함하고 있는바 대구에서는 이러한 온건항의 활동의 원인을 청와대나 중앙행정부처에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와는 달리 대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호정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청와대를 더욱 신뢰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정당성향이 청와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자 한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각 정당선호 변수는 무당파를 기준범주로 한 더미변수이다. 즉 표준화회귀계수 베타는 무당파 집단에 비해 각 정당선호집단의 청와대신뢰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각 정당선호집단들끼리의 청와대신뢰도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각 집단들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표 12〉의 분산분석결과를 보면, 대구의 경우 각 집단의 평균이 무당파 1.25, 새누리당선호 1.86, 더민주당선호 1.05, 국민의당선호 1.30으로서, 기준집단인 무당파와의 평균차이가 새누리당선호 .61, 더민주당선호 -.20, 국민의당선호 .05이다. 즉 청와대신뢰도는 무당파 집단에 비해 새누리당선호 집단이 매우 높은 반면 더민주당선호 집단은 낮고, 국민의당선호 집단은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광주의 경우에는, 각 집단의 평균이 무당파 .95, 새누리당선호 1.86, 더민주당선호 1.13, 국민의당선호 1.06으로서, 기준집단인 무당파와의 평균차이가 새누리당선호 .91, 더민주당선호 .18, 국민의당선호 .11이다. 즉 청와대신뢰도는 무당파 집단에 비해 여타 모든 집단이 높은 가운데, 새누리당선호 집단이 매우 높은 반면 여타 집단은 그리 높지 않다. 결국, 다중회귀분석에서 나타난 청와대신뢰에 대한 지역별·선호정당별 영향의 차이는 각 지역의 무당파 집단의 청와대신뢰도 차이에 기인한다. 어쨌든, 회귀분석에서건 분산분석에서건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정당선호가 청와대신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화 이후 형성된 지역주의적 정당선호와 이에 따른 정부신뢰도의 차이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표 12〉 선호정당에 따른 청와대신뢰도의 일원분산분석

대구					광주				
선호정당	N	평균	F	p	선호정당	N	평균	F	p
새누리당선호	319	1.86	57.752	.000	새누리당선호	21	1.86	9.792	.000
더민주당선호	94	1.05			더민주당선호	190	1.13		
국민의당선호	47	1.30			국민의당선호	404	1.06		
무당파	313	1.25			무당파	135	.95		
합계	773	1.48			합계	750	1.08		

2) 중앙행정부처 신뢰

중앙행정부처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대구의 경우, 국민자긍심(.198), 애국심(.145), 민주체제선호(.097) 및 새누리당선호(.208)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온건항의(-.141)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광주의 경우, 국민자긍심(.315), 애국심(.168) 및 새누리당선호(.118)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중앙행정부처신뢰에 있어서도 청와대신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구와 광주에서 공히 국민자긍심, 애국심 및 새누리당선호의 3개 변수들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크다. 즉, 대구나 광주 지역을 불문하고 국민자긍심, 애국심 및 새누리당선호의 정도가 클수록 중앙행정부처를 더욱 신뢰한다. 특기할 점은 정당성향이 중앙행정부처신뢰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응답자들이, 청와대 보다는 덜하지만, 중앙행정부처에 대해서도 역시 정파적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오직 대구에서만 온건항의는, 청와대신뢰에서처럼, 중앙행정부처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구에서 온건항의는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오직 대구에서만 민주체제선호가 중앙행정부처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민주체제선호는 역시 오직 대구에서만 법원신뢰에도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아가, 변수 '민주통치중요'는 오직 대구에서만 국회신뢰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게다가 여타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다소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광주에서는 역시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대체로 부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종합적으로 보아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선호나 중요성 평가는 대구에서는 대체로 정부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곧 정치체제에 대한 감정이나 평가가 정부신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하고(아마 인과관계는 그 역이 될 수도 있다), 이 영향관계에는 대구의 여당성향이 매개변수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추측된다.

중앙행정부처신뢰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도 역시 정당선호 더미변수들이 각 정당선호집단들 사이의 신뢰도 차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까닭에, 아래 〈표 13〉에 선호정당에 따른 중앙행정부처신뢰도의 일원분산분석결과를 소개해둔다. 대구에서건 광주에서건 중앙행정부처신뢰도는 새누리당선호 집단이 뚜렷이 높고 여타 모든 집단들은 낮은바, 정당선호가 중앙행정부처신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표 13〉 선호정당에 따른 중앙행정부처신뢰도의 일원분산분석

대구					광주				
선호정당	N	평균	F	p	선호정당	N	평균	F	p
새누리당선호	314	1.65	40.515	.000	새누리당선호	21	1.67	5.347	.001
더민주당선호	94	1.04			더민주당선호	189	1.16		
국민의당선호	47	1.21			국민의당선호	404	1.11		
무당파	310	1.15			무당파	135	1.04		
합계	765	1.35			합계	749	1.13		

3) 국회 신뢰

국회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대구의 경우, 국민자긍심(.124), 애국심(.088), 민주통치중요(.082) 및 새누리당선호(.144)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광주의 경우, 국민자긍심(.291), 애국심(.127), 새누리당선호(.100), 더불어민주당선호(.110) 및 국민의당선호(.113)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투표참여(-.106)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앞의 청와대신뢰와 중앙행정부처신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신뢰의 경우에서도 대구와 광주에서 공히 국민자긍심, 애국심 및 새누리당선호의 3개 변수들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오직 대구에서만 민주통치중요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바 있다. 한편, 광주에서는 투표참여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국회를 더욱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투표의 적극참여자일수록 정치 내지 국회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는바, 적극참여자들일수록 국회에 대한 부정적 정보의 획득을 통해 오히려 국회를 불신하게 되는 '악순환의 사이클'(장수찬 2002)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한편, 대구에서는 오직 새누리당선호 만이 국회신뢰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이와 달리 광주에서는 새누리당선호 뿐만 아니라 더민주당선호 및 국민의당선호 역시 국회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역시 회귀분석에 투입한 정당선호 변수들이 무당파 집단을 기준범주로 한 더미변수이기 때문이다. 아래 〈표 14〉의 일원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대구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선호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은 가운데 무당파나 여타 집단들의 평균이 유사하고, 광주의 경우에는 무당파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은 가운데 여타 집단들의 평균이 모두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국회신뢰 역시 정당선호에 영향을 받고 있다.

〈표 14〉 선호정당에 따른 국회신뢰도의 일원분산분석

대구					광주				
선호정당	N	평균	F	p	선호정당	N	평균	F	p
새누리당	318	1.17	12.063	.000	새누리당	21	1.29	3.716	.011
더민주당	93	.85			더민주당	190	1.02		
국민의당	47	.81			국민의당	403	1.04		
무당파	313	.89			무당파	136	.85		
합계	771	1.00			합계	750	1.00		

4) 법원 신뢰

법원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대구의 경우, 국민자긍심(.175), 애국심(.142), 민주체제선호(.134)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광주의 경우, 국민자긍심(.271)과 애국심(.120)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여타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와 마찬가지로, 국민자긍심과 애국심은 대구와 광주에서 공히 법원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오직 대구에서만 민주체제선호가 법원신뢰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바,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바 있다. 다만,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대구에서건 광주에서건 어떠한 정당선호 정향도 법원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이 역시 회귀분석에 투입한 정당선호 변수들이 무당파를 기준범주로 한 더미변수이기 때문이다. 아래 〈표 15〉에 선호정당에 따른 법원신뢰도의 일원분산분석결과를 소개해둔다. 법원신뢰도는 두 지역 공히 새누리당선호 집단이 여타 모든 집단들 보다 높으며, 법원신뢰에도 여전히 여야성향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표 15〉 선호정당에 따른 법원신뢰도의 일원분산분석

대구					광주				
선호정당	N	평균	F	p	선호정당	N	평균	F	p
새누리당선호	317	1.56	12.623	.000	새누리당선호	21	1.62	2.275	.079
더민주당선호	93	1.28			더민주당선호	191	1.38		
국민의당선호	47	1.11			국민의당선호	405	1.32		
무당파	312	1.29			무당파	135	1.23		
합계	769	1.39			합계	752	1.33		

V. 요약과 결론

이상에서 대구와 광주 두 지역의 국가, 정치체제, 정부, 정당 및 정치적 자아에 대한 정향들의 현황, 그리고 이러한 정치정향들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먼저 정치정향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국가에 대한 정향 즉 국민자긍심이나 애국심은 두 지역 사이에 차이가 없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정치체제에 대한 정향으로서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선호도나 민주적 통치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두 지역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선호도는 광주가 대구 보다 조금 높은 편이나 민주적 통치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두 지역이 동일하다. 즉 두 지역 모두 10 중 7, 8명은 국가나 체제에 대해 긍정적 정향을 갖고 있다. 다만, 정부나 정당에 대한 정향은 두 지역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에 대한 정향은 정부신뢰로 측정했던바, 두 지역의 정부신뢰도는 정부기관에 따라 100 중 30-40점대에 분포되어 있으며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다. 지역별로는,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차이가 없으나 청와대-중앙행정부처-법원의 순으로 대구가 광주 보다 더욱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주지의 사실이지만 정당에 대한 정향 역시 두 지역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대구는 새누리당, 광주는 국민의당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이 높다. 끝으로, 정치적 자아에 대한 정향으로서 주관적 이념성향은 두 지역 모두 전반적으로는 중도성향인 가운데 광주가 대구에 비해 진보적 성향이 조금 더 강하다. 그리고 정치참여정향은 투표참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참여정향이 낮은 가운데, 온건항의활동과 투

표참여는 광주가 대구 보다 조금 더 활발하나 여타 유형의 정치참여 즉 선거활동, 공공활동 및 과격항의활동은 두 지역 간의 차이가 없다. 결국, 두 지역 사이에서 국가에 대한 정향은 차이가 없고, 체제에 대한 정향 중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선호도에서 미미한 차이를 보이고, 정치적 자아에 대한 정향은 이념성향과 온건항의활동 및 투표참여에서 역시 미미한 차이를 보이며, 오직 정부와 정당에 대한 정향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치정향들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국가에 대한 정향인 국민자긍심과 애국심은 대구와 광주에서 공히 모든 4개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에 대해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크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이념성향이나 정당성향 등 여타 정향변수들이 모두 통제된 점을 감안할 때 국가에 대한 긍정적 정향은 지역이나 선호정당 혹은 이념성향을 불문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지탱해주는 정향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신뢰에 보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당선호정향이다. 대구나 광주에서 공히 여당선호 집단은 여타 모든 정파 집단들에 비해 4개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여당선호자는 대구에는 다수이고 광주에는 극소수인바, 정당선호 그리고 이에 영향 받는 정부신뢰는 여전히 지역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오직 대구에서는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선호나 중요성 평가가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4개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마 사실상의 영향관계는 거꾸로 정부신뢰에서 체제 선호나 평가의 방향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이 영향관계에는 대구의 여당선호정향이 매개변수로 작용했을 수가 있다고 추측된다. 그 외의 정치정향들 중에서는 온건항의가 대구에서 청와대와 행정부처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투표참여가 광주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여타 정치정향들 즉 이념성향, 선거활동, 공동활동 및 과격항의는 두 지역 모두에서 어느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특히 많은 연구들에서 주제가 되어온 두 지역의 이념성향은 어떠한 정부기관의 신뢰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해둔다.

이렇게 분석된 두 지역의 정치정향의 특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서 소개한 이스튼의 정치적 지지 이론의 시각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본다. 국가에 대한 정향 즉 애국심과 국민자긍심은 두 지역 간 차이가 없이 높은 편이다.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긍정적 정향도 두 지역이 모두 높은 가운데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선호감정은 광주가 대구에 비해 약간 더 높으나, 민주적 통치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두 지역 간 차이가 없다. 즉, 국가나 체제에 대한 포괄적 지지는 두 지역이 별 차이 없이 높다. 그러나 정부나 정당에 대한 구체적 지지는 두 지역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광주가 대구 보다 더욱 낮고, 대구는 현재의 여당을 그리고 광주는 야당을 더욱 지지하며 이러한 정당선호정향은 정부신뢰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마 앞으로도 정부나 정당에 대한 구체적 지지는 서로 연관되면서 두 지역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구체적 지지는 등락을 거듭하더라도, '포괄적 지지는 구성원들이 그들의 욕구나 요구에 반하는 정부의 산출물이나 성과를 수용하거나 관용하도록 하는 호의적 태도나 선의지의 저장소'라면 대구나 광주의 국가나 체제에 대한 높은 포괄적 지지도는 선의지의 저장소로서 기능을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영향분석에서도 특히 애국심과 국민자긍심은 두 지역에서 공히 정부신뢰에 강한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이는 야당선호의 정부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한다. 그렇다면 정당선호에 근거한 지역주의는 통상 우려하는 소위 망국병일까?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남부지역은 공화당을 북부지역은 민주당을 지지해왔었다. 그리고 독일의 바이에른 주에서는 기독교사회연합(CSU)이 지역패권정당이다. 굳이 말하자면, 국가의 멸망은 내부적으로 애국심이나 국민자긍심이 아주 쇠약해지면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건강하다면 정치체계는 정부나 정당으로 인한 상처를 자가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포괄적 지지와 구체적 지지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자아에 대한 정향인 이념성향과 정치참여정향은 두 지역이 이질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념성향은 두 지역 모두 중도성향으로 수렴되는 가운데 광주가 대구 보다 미미하게 진보성향이 강하다. 정치참여정향은 온건항의와 투표참여 정향이 광주가 대구 보다 미미하게 강하나 여타 유형의 정치참여 정향은 차이가 없다. 즉, 이 두 가지 성격의 정치적 자아는 두 지역이 거의 동질적이다.

대구나 광주 혹은 영호남의 지역정치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지역주의에 초점을 맞춘 까닭에 여러 가지 정치정향들 중 지역적 차이가 나는 정향들만을 비교분석하거나 혹은 지역의 정치정향들을 지역주의의 종속변수로 다루었다. 이리하여 두 지역의 다양한 차원의 정치정향들을 독립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예를 들어 국가에 대한 정향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되고 정치참여정향의 분석은 일부 참여형태에만 국한되었다. 주요 정치적 대상인 국가, 체제, 정부, 정당 및 정치적 자아에 대한 정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본 연구에 따르면 두 지역의 정치정향체계 혹은 정치문화는 전반적으로 보아 이질성 보다 동질성이 더욱 크다. 결국, 정치문화의 차원에서 두 지역 사이의 정치적 '균열'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두섭·강남준. 2008.『회귀분석 기초와 응용』. 서울: 나남.

김우택·김지희. 2002. "신뢰의 개념과 신뢰 연구의 맥락." 김우택·김지희 편.『한국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 미시적 접근』. 서울: 소화.

김진하. 2006. "정치의식의 지역차이: 지역주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한국정당학회보』5(1), 199-234.

류태건. 2016. "지난 30년간 한국의 정치신뢰 변화 - 정부·통치체제·국가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21세기 정치학회보』26(1), 1-28.

박희봉. 2010. "한국 대학생의 지역주의: 지역별 가치관, 정치이념, 그리고 정치참여".『한국정책연구』10(3), 157-174.

이갑윤. 2002. "지역주의의 정치적 정향과 태도".『한국과 국제정치』18권 2호, 155-178.

장수찬. 2002.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 결사체 참여(civic engagement), 사회자본(social capital), 그리고 정부신뢰(confidence in political institutions)."『한국정치학회보

』 36(1), 87-112.

전용주·김도경·서영조. 2008. "부산·광주지역 대학생들의 정치성향 비교연구: 설문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2(4), 289-314.

Almond, Gabriel A. and Sidney Verba. 1965. *The Civic Cultur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Barnes, Samuel H., Max Kaase et al. 1979. *Political action: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democraci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Easton, David. 1965.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_____. 1975. "A re-assessment of the concept of political suppor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 435-457.

Parsons, Talcott. 1951. *The Social System.*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Parsons, Talcott and Edward A. Shils, eds. [1951] 1967.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Gleitman, Henry, Alan Fridlund & Alan Reisberg. 1995. *Basic Psychology,* 4th ed. New York: W. W. Norton & Co. (Henry Gleitman et al. 장현갑·안신호·이진환·신현정·정봉교·이광오·도경수 역. 1999. 『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Verba, Sidney, and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Weber, Max. 양회수 옮김. 1998. 『사회과학논총』. 서울: 을유문화사.

류태건(柳泰建): 1989년 프랑스 그르노블 정치대학(Sciences Po Grenoble)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정치사상사이나, 근래의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및 정치행태이다. 『유교의 자연과 인간』(세종출판사 2002), 『정치학으로의 산책』(한울 아카데미 2009. 공저), 『지방자치의 이해-한국 지방자치제도를 중심으로』(부경대학교 출판부 2012), 『사회자본연구-지역발전의 모색』(세종출판사 2015) 등의 저서와 "한국·일본·미국·독일의 대인신뢰와 정부신뢰: 수준과 영향요인 비교분석"(한국정치연구 2014), "'해양수도' 부산시 해양문화정책의 현황과 특성"(동북아 문화연구 2014) 등의 논문이 있다(tgyoo@pknu.ac.kr).

〈논문접수일: 2016. 7. 9 / 심사개시일: 2016. 7. 20 / 심사완료일: 2016. 8. 8〉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litical Orientations and Their Influences on Trust in Government between Daegu and Gwangju

Yoo, Taegun

This article is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litical orientations and their influences on trust in central government between Daegu and Gwangju, on the basis of data analysis of the survey performed in April 2016 for the two metropolitan cities. The political orientations to be analyzed are patriotism and national pride as orientations to the nation; preference and evaluation of democracy as orientations to the regime; trust in Cheongwadae(Blue House), central administrative department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ourt as orientation to the government; political party preference as orientation to the political parties; ideologic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endencies as orientations to self as political actor. Results of analysis show as follows. Between the two cities there are a distinct difference in the orientations to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but not much in other orientations. On trust in government between the two cities all alike, patriotism and national pride have strong positive influences; opposition party preference has negative influence while ruling party preference having positive one; and other political orientations have not much influences. After all, except the differences in party preference and trust in government caused by 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al orientations and their influences on trust in government are not so different between the two regions.

Key Words: political orientation, trust in government, Daegu, Gwangju, regionalism